

건설소식

건설하도급 부당행위 확 줄었다

2월 첫 조사때 585건 → 4월 17
건으로 급감, 상반기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건수 7건 그쳐

|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행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실시된 전국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의 적발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2월 첫 조사 때 하도급대금 부당지급 적발건수는 무려 585건에 달했지만 3월 조사 때는 34건으로 대폭 줄었다.

4월 적발건수는 3월보다 절반이 줄어든 17건에 그쳐 점검현장 대비 적발률이 1% 미만에 머물렀다.

실태조사는 국토부의 29개 산하기관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모든 현장(약 1,700개)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시행된다.

특히 SOC 중심의 정부 경기부양 노력 속에 신규 개설현장이 더욱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위반행위의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실태조사와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적발,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위반 영업정지 처분건수도 6월 현재 7건에 그쳤다.

이는 연간기준으로 34건에 달했던 작년에 비해 기간을 감안해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관련 영업정지 처분건수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힘입어 사상 최저였던 2007년(28건)을 밑돌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올해 초 도입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포함한 각종 하도급업체 보호정책들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다만 하도급대금 부당지급 행위를 포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앞으로도 지속하고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내실화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건설 하도급 관행의 클린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대형 숙박시설·목욕탕, 중수도 반드시 설치해야

| 앞으로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과 목욕탕을 신축할 때는 중수도(재사용수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도 중수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법'을 의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법안은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물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예방하고자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업체만이 설계, 시공토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도 빗물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도는 빗물이나 목욕탕물을 정화해 수세식 화장실 등에 재활용할 수 있게 한 수도를 말한다.

환경부, 2010년 건축자재 오염 방출 표시제 시행

환경부는 오는 2010년부터 벽지나 페인트, 바닥재 등 각종 건축자재에 유해화학물질의 방출량을 표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원천적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

출량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도는 실내 마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접착제, 페인트, 벽지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판매·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오염물질 방출 정보를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친환경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정보가 부족해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벽지,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실내마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접착제, 페인트, 벽지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는 판매와 사용 전에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오염물질 방출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목질판상제품의 경우 '사전인증제도'도 도입했다.

목질판상제품은 목재 또는 목질원료에 접착제 등의 결합제를 사용하고 온과 고압으로 성형·열압한 뒤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공사 원도급 여부 확인해야

행정법원, 재하도급 준 전문건설사에 과징금부과 정당

건설업체가 공사를 받을 때 자신이 받는 공사가 원도급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 행정제재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최근 전문건설업체 A사가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것은 재하도급 금지규정이 아니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문업체인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사를 또 다른 건설업체인 C사에게 재하도급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규정 위반으로 A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B사와의 계약서에 발주자(시행사 D)와 수급인이 모두 B사로 돼 있고 △참여한 공사가 B사의 아파트 고유 브랜드가 사용됐을 뿐 아니

라 △B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B사가 직접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소개돼 있어 자신이 계약한 공사가 하도급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현장 입구에 D사라고 기재된 표지판이 게시돼 있었고 △B사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건설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하도급계약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액도 과거 범위 반 전력,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1/2 감경 처분해 동대문구청장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진행 위치정보 서비스 구축

나라장터에서 계약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계약 진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계약진행 위치정보 서비스’를 구축,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계약 진행단계마다 전자문서를 받아왔지만 문서 수발 전까지는 계약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국가재정시스템이 디지털회계 시스템, 지방재정, 교육재정으로 나

닌 상태에서 서로 다른 기관간 연계 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해당 기관에 이중으로 확인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송수신한 문서로 현재의 계약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진행 위치정보 서비스는 계약진행 상황을 조달요청, 입찰, 계약으로 구분하고 월평균 770만 건에 달하는 문서 43종을 제공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진행 위치정보 서비스로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절감되고 사용자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ی겠다”고 밝혔다.



국토상식

집 수도관, 이젠 청소하고 살자!

집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집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기관에 의해 최근 발명돼, 국토해양부가 건설신기술 제 526호로 지정했습니다.

이 신기술은 폴리-피그(Polly-Pigs)라는 세관기를 수도관에 투입해 이 세관기가 수도관을 청소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신기술을 적용하면 수도관을 항상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기술은 기존의 기술보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화학적 방법이 아니어서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기술입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경보'

사업장 질식사망자 40% 이상 여름에 발생

노 동부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몰리는 여름철을 맞아 밀폐공간 질식재해위험에 대해 경보를 발령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아파트 오·폐수 처리장,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재해자 10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의 40% 이상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 여름기간 동안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등 밀

폐공간 작업 시 3대 안전작업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대상장비는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5종으로,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보건산업 → 질식예방장비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역본부(지도원)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공사의 공사비 책정 현실 맞게 상향조정

조달청, 전산시스템 보완해 7월부터 본격 실시

공 공공사의 품질시공을 유도하고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 책정이 현실화 된다.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원활하나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비가 현실가격에 맞도록 시장조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분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격조사를 현재 년 2회에서 조사

주기 단축, 상시 가격점검 등 시장조사를 강화하고, 공사비 비중이 큰 시장시공가격은 실적공사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품목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해 나간다.

대량구매 기준의 가격적용이 중소기업 공사에서는 구매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매량(설계량)에 따라 적용가격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사비 책정이 낮아 공사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격현실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조달가격의 객관·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건설업체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시공가격 등 가격자료의 인터넷(나라장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조사 및 품목정비,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 및 구축한 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전교육 이수 일용직 근로자 2년간 신규채용시 교육 면제

앞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2년간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신규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게 했다.

노동부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고용 특성 등으로 대부분 신규채용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일용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산재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도 저탄소 녹색바람

음식물쓰레기 바이오에너지 전환 시설 건립 등 추진

환 경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하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잉여열을 활용코

자 새로운 시설을 연구 개발하고 설립하는 것.

경남 양산시는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바이오사스화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올초부터 국내에 도입하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조정조에 넣어 발효시킨 후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기와 보일러 등 가스이용설비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메탄가스는 열병합발전연료나 압축 천연가스(CNG)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유기성 폐기물 정화조는 개방형(호기성 방식)이 아닌 폐쇄형(혐기성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술력이 필수로 알려졌다.

양산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유산동 매립장에 설치되며 전체 1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하루 가축분뇨 70톤, 음식물쓰레기 5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양산시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력은 하루 1만 572kWh(연간 4억1,900만원) 수준이다.

경북 영덕군의 소각시설 잉여열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잉여열을 회수하는 증기터빈 발전기(200kWh

급)를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루 2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에 적용하면 연간 4,200만원의 전력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연간 57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에너지사용 합리화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양시에도 A건설이 하루 150톤을 처리하는 열분해 용융시설 2기를 건설하고 있다.

2009년 6월 1일 현재 76%의 공정률로, 2010년 완공되면 용융물(제품·메탈슬래그)을 △시멘트 원료 △아스팔트 골재 △보도블록 △건축용 콘크리트 블록 △건설기계 등에 재활용 된다.

연간 9만톤의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면 △제품슬래그 1만1,118톤 △메탈슬래그 1,267톤 △비산재 1,105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 하도급법 위반 적발

공정위,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정조치

지 방자치단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군의 하도급대

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대금지급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는 흔치 않은 일로 지난 2005년 인천시와 작년 진해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금산군은 A사에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 중 일부를 계약하고, A사는 B사에 공사를 하도급 했지만, 원사업자인 A사 측의 부도로 B사 측은 공사완료(2007년 9월) 후 1년이 넘도록 공사대금(13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B사가 A사 부도 이후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와 하도급대금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받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우선해 금산군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B사 측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도급채권의 범위 내)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한 제도다.

15.8조 투입 바이오매스 타운 건설 박차

A건설 주도 ‘에코 스타트 프로젝트’…전국 600개 녹색마을 에너지 공급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연구의 중심에 건설업체가 있다.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5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4개의 녹색마을 시범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 600개 녹색마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기술연구원 위탁으로 작년 12월부터 ‘에코 스타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에코 스타트 프로젝트’의 목적은 전국 600개 녹색마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개발이다. 연구개발비만 92억원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A건설이 총괄하여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A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농촌의 에너지자립도를 40~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이상 1MW급 열병합 발전소와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 개발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팀이 임실, 고창, 부안, 속

초, 흥성, 문경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창군과 임실군이 상대적으로 바이오매스량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임실과 고창이 정부 추진 바이오매스 타운 건설대상지로 유력해진 셈이다.

현재 프로젝트팀은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정부가 매년 실업자 1인에게 투입하는 예산이 2만 5,000달러다.

반면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투자해 일자리 1개를 창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만~1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는 뜻이다.

프로젝트팀은 한국형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성공의 관건으로 정부와 지자체, 주민, 건설업체의 협력을 꼽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지원체계와 주민들의 관심은 사업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업체가 가진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A건설은 “기업 스스로 꾸준한 환경기술 개발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화 시설 건설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 타운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사업을 통해 실적을 쌓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